

연구사업보고서 09-01

**세계 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2009년 6월

제주평화연구원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새 과제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평화' 개념의 역사적 전개
 2. 「세계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재검토
- III.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평가
 1.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추진 상황
 2.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IV.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의 제안
 1. 한·중·일 정상회담의 유치
 2.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
 3. 「제주 프로세스」의 제도화
 4. 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
 5. 세계적 수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6. 평화봉사활동의 국제화
- V. 맺는 말

I. 문제의 제기

동서냉전의 해체를 촉발한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1년 4월 제주를 방문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가자는 운동이 싹텄다. 이러한 '평화의 섬' 운동은 관 주도 형태의 '위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다. 특히 '평화의 섬'은 제주출신 학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졌는데, 여기에는 제주도를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 담론 및 실천의 구심체로 만들어나가자는 비전이 핵심을 이루었다.¹⁾

제주도에 대한 관광 이외의 또하나의 국제화 전략이기도 했던 이러한 '평화의 섬' 구상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식인·오피니언 리더들의 협의체인 「제주국제협의회」가 1991년 6월에 창립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언론 등이 나서 이러한 구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평화의 섬' 운동은 제주도민의 광범한 공감대속에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였다. 그 이래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지 4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과업 내지 사업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 또한 가시지 않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개념²⁾조차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

1) '평화의 섬'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시작은 1991년 5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태평양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당시 미국 쉐터키대의 문정인교수(현 연세대 교수)와 제주대 고성준, 양영철 교수가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부터라고 한다(고성준외, 2005).

2) '평화'란 말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먼저 서양의 평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라틴어에서 온 '팍스(Pax)', 희랍어에서 온 '에이레네(Eirene)', 히브리어에서 온 '샬롬(Shalom)' 등이 있다. BC 1세기말 이래 200여년에 걸친 로마제국의 피정복 민족 통치를 일컫는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Pax Romana)' 나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가리키는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ica)',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적 세계지배를 뜻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말들에서의 '팍스'는 '정복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 즉 '힘의 평화'를 의미한다.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이레네'는 에우노미아(Eunomia·질서), 디케(Dike·正道)와 함께 계절의 여신으로서, 변전하는 가운데서도 엄숙한 '질서'와 사물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의해서 4계는 돌아가며, 그 결과 풍년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에이레네'는 또 '휴전이나 쌍방협정에 의한 현상고착으로서의 평화'를 뜻하기도 한다. '샬롬'은 천재지변, 강도떼, 악한 이웃들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온 히브리인들의 인사말로서

은 마당에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범주를 확정하기란 애당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일궈나가기 위한 허브(hub)를 제주도에 구축하려는 미래지향적 정책의 가시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원대한 비전에 기초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세계평화의 섬」은 단순히 이론적·담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토대를 두어 구현해야 할 실천 과제이자 목표라 하겠다.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지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구현을 위한 사업은 백화점식으로 망라하기 보다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가는 이정표에 따라 선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하자면, 제반 여건과 역량을 감안한 가운데 「세계평화의 섬」지정의 본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첫째, 「세계평화의 섬」개념과 관련해 본래의 ‘평화의 섬’운동 취지 등과 연계하여 이론적인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세계평화의 섬」구현을 위해 추진해온 과업 내지 사업을 점검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 「세계평화의 섬」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향후의 새로운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는 그동안 「세계평화의 섬」구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새로운 과업을 제안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의 순항을 돕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다.

평화의 영역으로 상대방을 맞아들임을 의미한다. “잘 오셨소”, “당신에게 평화를!” 정도의 뜻이다. 또 ‘살림’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함’, ‘충만함’ 등이 깃든 사회나 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하다. 한편 동양의 평화 개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서는 인도어 ‘샐티(Shanti)’와 중국어 ‘허평(和平)’, 한국어 ‘평화(平和)’ 등이 있다. ‘샐티’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범어)로 ‘정신적 만족’ 내지는 ‘인간의 내면세계의 심오한 통합’을 의미한다. 또 ‘허평’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모두가 평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중국어의 ‘평허(平和)’는 ‘부드럽다’, ‘온순하다’, ‘고요하다’ 등의 뜻으로 ‘허평’과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말의 ‘평화’에서 ‘평(平)’은 평등, 평균, 평안, 평정, 평형 등의 뜻으로 ‘고른’, ‘곧고루’를 의미하고, ‘화(和)’는 화합, 조화, 협조, 중도, 적합, 화동 등의 뜻으로 ‘어울림’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평화’는 ‘곧고루 어울린다’, ‘모두가 아무런 장애없이 조화로움을 이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최관경, 2004).

II.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평화'개념의 역사적 전개

'평화'라는 말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그 개념의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평화연구' 또는 '평화학'이 출현하면서 보다 정교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1) 전쟁 부재 상태 : 소극적 평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은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에 대비하라', '상대방 국가보다 힘의 우위에 있어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들은 모두 오래 전부터 전쟁과 평화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해 왔음을 함축한다(정해준, 2005). 5,500년의 인류문명사에 있어 전쟁 없이 보낸 해는 292년에 불과하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³⁾

'전쟁 부재 상태로서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 부르는데, 이러한 소극적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뜻하며 평화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해법을 말한다. 즉 내가 타인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있는 한 타인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지만 나의 힘 보유가 타인에게 곧 위협의 요소로 전환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김기정, 2000). 이러한 소극적 평화 개념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두고 주로 서구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2) 구조적 폭력의 해소 : 적극적 평화

1960년대 이후 인종·종교·계급집단 등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충돌과 분쟁,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에서는 빈곤, 착

3) 근대에만도 1480년에서 1965년까지 308회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국가간 전쟁이 152회, 제국식민전쟁이 70회, 시민전쟁이 86회 발발했다(Quincy Wright, 1965).

취, 차별, 소외, 기아, 질병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인류에게 전쟁만큼이나 심각한 평화의 저해요인으로 떠올랐다(정해준, 2005).

‘평화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이러한 평화의 저해요인을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갈통은 인간사회에서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제거돼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갈통은 폭력에는 전쟁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등 가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인에 의해 행해지기 보다는 사회구조 자체가 가하는 ‘구조적 폭력’이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최근에는 더 나아가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란 개념을 소개했다. 문화적 폭력이란 물리적(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간접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문화의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언어와 예술, 경험과학과 형식과학(논리학 등), 언론과 교육 등을 통해 직접적 폭력행위나 구조적 폭력의 실체가 정당하다거나 최소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간주되어 폭력이 합법화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가리킨다. 갈통에 의하면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다는 것이다(김차희, 2003).

3) 인간안보로서의 평화

1990년대에 들어서 탈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이 인간 개개인의 안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대두되었다. 이에 안전보장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1994년에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기본개념으로서 국가안보와 대치된다.⁴⁾ 국가의 안전보장은 주권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인간의 안전보장은 전쟁·폭력·기아 등 생존과 관련된 위협, 부상·질병 등 신체적인 위협, 실업 등 경제적인 위협, 차별과 억압 등 사회·정치적인 위협을 포괄한다. 인간의 안전보장론과 갈통의 이론은 매우 근접해 있다. 인간안보론에서 강조하는 빈곤·실업·범죄·환경 파괴 등은 갈통의

4) 유엔개발계획(UNDP)이 설정한 인간안보의 7가지 분야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안보 △정치안보 등이다.

‘구조적 폭력’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이삼열 외, 2001).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평화의 조건이 된다.

요컨대 평화의 개념은 국가중심의 소극적 평화에서 시작되어, 사회구조 차원의 적극적 평화로 확장되고, 마침내 인간안보에 이르러 국가·사회적 차원을 포함해 인간의 생존 및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재검토

1)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이념적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이어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5조). 또한 이 법은 제주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는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또 2005년 1월 27일 정부가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삼무(三無)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선언문과 특별법에 명시된 △삼무정신의 전통 △제주4·3의 승화 △정상외교의 정신 △남북의 상생과 공영 외에도, 삼성(三姓)신화 등 제주민 사이에 신화와 설화, 전설 등의 형태로 오랜 세월 갈무리되어 온 보다 원초적인 평화의식 내지 공동체정신 또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이념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7월 1일에 선언된 「제주평화현장」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섬’ 이

념을 일상속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즉 △천혜의 자연을 아끼고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를 이룩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을 키워나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관용과 화합의 사회를 구현한다,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국제연대를 통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등의 구절이 그것이다.

이처럼 「세계평화의 섬」 개념은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 내지 인간안보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세계평화의 섬」은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지적·물적·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평화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셈이 된다.

2) 「세계평화의 섬」 개념의 재검토

「세계평화의 섬」을 이처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내지 인간안보까지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과업 내지 사업의 범위 또한 이에 발맞춰 크게 확장된다. 이는 동시에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름해줄 잣대가 불분명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제주도내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개념인 ‘평화산업’과 ‘평화사업’이 평화관광산업(역사문화관광, 생태관광, 크루즈관광), 평화기반산업(국제금융, 청정에너지, 국제회의), 기타 평화사업(평화교육, 평화대공원조성, 세계평화섬영화제, 세계평화재판소, 평화저널리즘) 등⁵⁾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평화’라는 가치적 개념을 ‘사업’이라는 사실적 개념으로 환치해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그 적정범위를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게 선을 긋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기 위한 사

5) 제주발전연구원(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제주발전연구총서 06) 참조.

업의 범주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자원과 역량의 제약으로 이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담보되기 어려울 뿐더러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 구현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적 판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 평화 내지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사회의 보편적 이상을 담고 있는 구극적 개념이라 할 것이다. 즉 이는 하루아침에 도달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목표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들을 망라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발상에 지나지 않을런지 모른다. 국가·사회적 차원을 포함해 인간의 생존 및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평화의 조건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산업은 ‘평화사업’이자 ‘평화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길현(2007: pp.22-23)도 적극적 평화의 개념처럼 “다분히 장기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과제로 설정”(이민룡, 2000)하는데 치우치다보면 평화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평화의 섬’ 구상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불안과 갈등요인을 줄이고 협력과 평화를 이룩함에 있어 제주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역할찾기와 전략모색에 중점을 두는 실천적 프로젝트로 규정짓고 있다.

한편 ‘세계평화의 섬 모형’은 △비무장 평화지대화 모형 △경제특구화 모형 △국제교류·협력의 거점 모형 △인권/생명 상생 모형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2007). 여기서 이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주도를 비무장화 내지 중립지대화하자는 ‘비무장 평화지대화 모형’은 중앙정부의 승인과 주변국의 협력 내지 국제적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제주도로 하여금 지역평화를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 모형은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특구화 모형'은 제주도의 지경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하여,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고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경제권,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간의 연계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장래에 가시화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역할을 맡고자 하는 모형이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세계평화의 섬 모형'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양대축으로 하여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펼쳐나가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계평화의 섬」을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함으로써 제주는 전국의 다른 경제특구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교류·협력의 거점 모형'은 제주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살려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제주도를 국제교류·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안보·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함은 물론, 세계 정상들이 제주를 즐겨찾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를 '정상회담의 메카'로 조성해 나간다.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문으로 제주에서 한-소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2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2009년 6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제주도는 국제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인권/생명 상생 모형'은 한국 현대사 최대비극의 하나인 제주4·3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인권 평화의 표본으로 만드는 한편,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를 생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적 평화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가꿔나가자는 것이다. 이 모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평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어느 한 모형의 「세계평화의 섬」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여 다른 모형을 전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제교류·협력의 거점 모형'과 '경제특구화 모형'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국제교류·협력의 거점 모형'이 「세계평화의 섬」의 대외적 측면의 목표라면, '인권/생명

상생 모형'은 대내적 측면의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평화의 섬」 추진체간의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43의 경우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연구소」, 43관련 시민단체 등이 43의 아픔을 용서와 화해, 상생과 화합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로 승화시킴으로써, 21세기의 보편적인 인권 평화의 모델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는 '적극적 평화' 등을 구현하기 위해 △평화교류 △평화안전 △평화환경 △평화문화 △평화봉사 등 분야별로 다양한 평화실천사업을 전개하는데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역할분담은 암묵리에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평화의 섬」의 개념에 대해 '평화의 섬' 운동 초기에 내걸었던 대의를 보다 충실하게 살리는 차원에서, "제주도를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 담론 및 실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목표"라는 협의의 정의에 입각해 향후의 새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기존 사업의 평가

1.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추진 상황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선정하고 추진해온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의한 17대 사업'을 들 수 있겠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의한 17대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따른 후속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17대 사업은 크게 4가지, 즉 '동북아 교류·협력 사업', '한반도 평화정착 사업', '제주43 관련 사업',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2007).

다음의 <표 1>은 17대 사업을 범주별로 분류해 2009년 4월 현재의 추진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17대 사업의 범주별 분류 및 추진 상황

범주명	사업명	추진 상황
동북아 교류·협력 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완료
	제주평화포럼 개최	계속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계속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미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추진중
한반도 평화정착 사업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완료
	감골보내기 운동	계속
	민족평화축전 개최	완료
제주4·3 관련 사업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추진중
	제주4·3 유적지 보존관리	추진중
	제주4·3 진상보고서 국사교과서 활용	완료
	제주4·3 추모일 지정	미추진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 사업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완료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완료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추진중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미추진
	평화교육 지원	계속

*〈표 1〉의 ‘추진상황’에서 ‘완료’는 완료된 사업, ‘계속’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추진중’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 ‘미추진’은 착수되지 않았거나 유보된 사업을 각각 뜻한다.

이 17대 사업 가운데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민족평화축전 개최 △제주4·3 진상보고서 국사교과서 활용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등 6개 사업은 완료되었다. 즉,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사업은 2006년 3월에 제주평화연구원이 개원함으로써 완료되었다. 또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제주에서 2000년 9월에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잇달아 열린 데 이어 2005년 12월에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제주도가 남북회담 거점으로서 자리잡는 성과를 거두었고, △민족평화축전은 2003년 10월에 남북한 민간단체의 주최로 제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 △제주43 진상보고서 국사교과서 활용 문제는 정부에서 채택한 제주 4·3 진상보고서가 국정교과서 1종과 검정교과서 5종에 각각 반영됨으로써 완료되었다. 그리고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는 2006년 9월에 개관하였다.

그리고 17대 사업 가운데 △제주평화포럼 개최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감귤보내기 운동 △평화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제주평화포럼은 2000년 6월에 열린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2009년 8월에는 제5회 제주평화포럼이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평화관련 국제회의는 2006년 12월과 2008년 11월에 각각 제5차, 제7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가 제주에서 열렸고, 2008년 5월에는 제1차 한·중·일 3자협력 포럼이 제주에서 열리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또 △감귤보내기 운동은 1998년부터 제주산 감귤·당근 등을 만성적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에 보내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평화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아카데미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7대 사업 가운데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제주43 유적지 보존관리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 즉,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제주43 평화공원 조성은 제1단계 및 제2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로, 마무리 제3단계에 있고, △제주43 유적지 보존관리는 집단매장지 정비, 유해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 그리고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사업은 평화테마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사업 가운데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제주43 추모일 지정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등 3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고

있거나 유보되었다. 즉,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사업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주 4·3 추모일 지정 역시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사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유보되었다.

한편 이러한 17대 사업 이외에도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평화현장 선포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 참가 △세계평화의 섬 상징체계(CI) 개발 △제주평화봉사단 창립 △세계평화도시와의 민간 교류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다.

2.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성과 및 한계

1)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성과

그동안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들은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돼 옴으로써 나름대로 다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17대 사업의 '동북아 교류·협력사업' 가운데 제주평화연구원 설립과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는 획기적인 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3월 개원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아시아의 안보협력 등을 통한 평화공동체 구현,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 담론 및 실천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세계적 평화연구기관인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EWC(하와이 동서문화센터) 등을 발전지향 모델로 삼는 한편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제주평화포럼의 경우 2009년 8월에 개최되는 제5회 포럼에서는 어젠다를 기존의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더욱 넓히는 등 평화와 안보·경제협력 관련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 특히 제주평화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적인 정치 및 경제 지도자, 전·현직 각료, 석학과 전문가, 외교관, 언론인 등이 대거 참석해 심도있는 담론의 장을 펼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선언을 공표해 왔다. 이를테면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는 '제주 프로세스'의 추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17대 사업의 ‘한반도 평화정착 사업’ 가운데 감귤보내기 운동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매해 11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감귤보내기 사업은 제주도내는 물론, 도외 거주 출향인사들의 성원까지 모아지면서 2009년으로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감귤보내기 운동은 해외언론에서 ‘비타민C 외교’로 높이 평가하는 등⁶⁾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17대 사업중 ‘제주43 관련 사업’으로는 43평화공원 조성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제주43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의 43평화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주시 봉개동 12만평 부지에 2002년 착공돼 위령제단과 위령탑 등을 완공한 데 이어 2008년 3월에는 43평화기념관이 개관됨으로써 인권·평화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제주43 평화공원은 앞으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패턴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사업중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2006년 9월 개관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대표적인 사업으로 들 수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는 그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세계정상들의 모습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한편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배경 및 과정 등을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동원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상시 개방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을 널리 알리고 그 정수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17대 사업 이외의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으로서 2007년 7월에 선포된 「제주평화헌장」은 특기할만하다. 「제주평화헌장」은 △인권 존중과 다양성 수용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 등 적극적 평화의 핵심적 메시지를 일상적 실천 덕목으로 구체화하여 천명하고 있다.

2)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한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 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시행하도록 명시하

6) 「아시아인 월스트리트 저널」, 2002년 8월 24일자 참조.

고 있는 4개의 사업 가운데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는 아직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3개 사업은 성공리에 시행돼 왔다고 하겠다. 즉,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개원으로 이미 완료되었고,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는 제주평화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은 감귤·당근보내기 사업 등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10년이상 지속돼온 데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제주도민 대표단의 방북과 각종 남북회담의 제주 개최, 그리고 2009년부터는 북한과의 제주 흑돼지 사육협력이 시작됨으로써 모범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하겠다.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견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17대 사업의 하나인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사업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좌초된 것은 이러한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사업을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 △제주국제평화센터 콘텐츠 확보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평화교육 지원 사업과 함께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일단 작위적으로 한데 묶어 놓았다. 그러나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도 애당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바도 없었다. 이는 비단 '다목적 평화인프라 구축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의한 17대 사업' 자체가 엄밀한 기준이나 체계 없이 잡다하게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전의 상황과 여건에서 의욕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즉, 「세계평화의 섬」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특정되기 어려웠고, 그 시행의 우선순위 또한 모호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지원이 성패를 절대적으로 가르는 사업과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한 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조를 맞춰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으로 구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추진 체계 내지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평화의 섬」 지정 5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보다 명료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대 사업 이외의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도 종전처럼 산발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IV.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의 제안

본고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의 문제점을 감안한 가운데,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협의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과제를 향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한·중·일 정상회담의 유치

1991년 4월 냉전체제 해체의 선도적 역할을 하던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여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한소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제주도민의 '평화의 섬' 운동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6년 4월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수상과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데 이어, 같은 해 6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주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정상외교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다. 그 후 2004년 7월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수상과의 한일정상회담이 다시 제주에서 열렸다.

특히 2009년 6월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브루나이) 정상들이 마주 앉아 금융·환경·평화 등 국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이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세계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정상외교의 중심지'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이 재삼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지난 1999년 이후 줄곧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세안+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2008년 12월 13일 일본의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 등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역내개최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즉 다자무대를 빌린 3국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한·중·일 3국내에서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기로 함으로써 제2차 정상회담은 2009년 중국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2010년 한국에서 각각 열리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연합뉴스, 2008년 12월 13일자).

아시아 중심 3국인 한·중·일의 제3차 정상회담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차원에서도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아니라 지방도시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점은 2010년 제3차 정상회담의 제주 유치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는 범도민적 역량을 결집해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제주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제주도를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 담론 및 실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목표”라는 「세계평화의 섬」 본래의 대의에도 부합하는 과업이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제주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야 하겠지만 도민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기구'를 유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껏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 등 제반 여건이 무르익어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는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주평화연구원도 출범이래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아태 평화활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즉, 군중심의 평화유지활동(PKO)에 경찰과 공무원, NGO, 일반시민의 비중을 높이고, 그 활동의 영역도 재난 구호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평화활동'이라는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설정해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평화활동센터를 창설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점 등 명분과 실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아태 평화활동센터' 설립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제주평화연구원은 2009년 들어 유엔 산하 국제기구 유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즉, 제주평화연구원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인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 유엔 훈련·조사 연구소)'의 센터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UNITAR는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히로시마에 '전초 대표사무소(out-posted representational office)'를, 그리고 스페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12개국에 '지역훈련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Local Authorities and Local Actors)'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훈련센터는 주로 평화와 안보에 관한 활동을 주로 훈련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에 필요한 연구도 큰 비중은 아니지만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센터의 운영에는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유치에는 면밀한 조사와 다각적인 분석 아래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주 프로세스」의 제도화

2007년 6월 제주평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구 소련과 동구권 해체를 이끌어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모델이 동아시아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특별세션이 포함되었다. 이 특별세션에는 CSCE/OSCE를 창출한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의 주역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이와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된 ‘제주선언문’은 “동북아 지역의 정부간, 비정부단체간의 지속적이고도 신축성있는 역내 안보대화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의 실현을 촉구한다”면서 “2005년 1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이러한 다자안보협의 프로세스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그동안 이러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추구하는 ‘제주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물론 제주 프로세스의 제도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안보·평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그 제도화에 진력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과제라 하겠다.

특히 제주 프로세스는 동아시아의 정상들이 제주도에 모여 역내 평화·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대화와 담론의 장을 ‘습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그 제도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6월에 열리는(삭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 프로세스의 제도화로 가는 여정에 의미심장한 단초가 되는 청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정인(2009)은 이와 관련,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

7) 1973년 7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미국, 캐나다, 소련, 그리고 유럽의 32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열렸다. CSCE 창설은 소련이 2차대전 직후 형성된 동구 위성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기를 원한데 대해, 미국이 인권조항 포함과 별도의 재래식 군축회담 개최 등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했다. 결국 이들 35개국은 CSCE에서 협상을 통해 1975년 12월에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한편 CSCE는 1995년 1월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상설기구화되었다(한용섭, 2005).

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비정부 행위자들의 노력이 병행될 때 제주 프로세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은 이를 위해 역내 ‘아이디어의 허브(hub)’로 자리잡아, 국가의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지역이익의 극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4. 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

통일독일의 형성과정에서 동·서독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이 민족동질성 회복, 더 나아가 통일후 행정통합에 까지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제주도민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해 있던 시절인 1998년부터 북한에 제주산 감귤을 보내는 교류협력사업을 벌이기 시작해 2009년으로 11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야말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선구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제주도의 남북교류는 지금까지 감귤·당근보내기 중심의 인도적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제주도의 개발지원 및 경험차원의 교류협력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대북 경험사업은 북한 개성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주산 마늘 임가공 경험이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남북협력사업 초기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제교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자매결연’을 북한과의 교류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북한측의 거부로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가는’ 교류가 아니라 서로가 ‘가고 오는’ 인적교류 위주의 자매결연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2006년 무렵부터 시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북한 ‘농촌 현대화사업’ 지원은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남북협력사업 유형으로 판단된다.

경기도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진행한 ‘농촌 현대화사업’은 전형적인 농촌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당곡리에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

로 도로 및 농로 포장, 주택 개보수, 탁아소 및 진료소 신축, 유치원 및 소학교 보수, 식수용 관정 설치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농민소득 증대 사업으로는 벼농사 지원, 온실 채소 재배, 농기계수리센터 및 도정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평안남도 대동군 등에 농기계수리공장·농민종합편의소 신축, 영농기자재 및 벼농사 지원, 비닐온실 설치 등을 추진해온 전라남도는 평양시에 발효콩 청국장 공장·발효콩 빵공장 건설, 남포산원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진행남, 2008a).

이러한 북한 '농촌 현대화사업'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는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한의 지원기관 실무자들이 수시로 방북을 해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이종무, 2009).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도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주도가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이 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세계적 수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국을 비롯 북아일랜드, 독일, 이스라엘, 남아공,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의 실정과 특수성이 반영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착실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통상분야에서의 협상과 중재에 대한 기본틀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이것이 학교의 갈등해결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된 미국의 경우나, 끊임없는 분쟁속에서 대화가 단절된 신·구교도를 만나게 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상호이해교육에서 출발해 이제는 시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경우나 모두 이러한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또 분파간·종교간 갈등이 끝없는 살상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 자신의 특성을 살린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평화교육이 앞선 나라들은 그들이 처한 고통스런 현실을 평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진행남, 2008b).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여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기존 모형을 소개하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독자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새로이 창출하려는 노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테러와 반테러의 악순환, 세계화와 그에 대한 반작용, 생태계의 위기 가속화 등 21세기의 급변하는 상황은 평화교육이 종래의 경직된 전략과 실천모형에만 의존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결론짓게 한다. 평화교육의 시대적·세계적 추세는 새로운 질병에 적합한 새로운 처방전을 찾기 위한 노력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21세기에도 세계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만큼 지구상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평화를 향한 참신하고도 과감한 교육적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을 위한 창의성 넘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도에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화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중속으로 파고드는 차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특징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발되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시대를 앞서나가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만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요컨대 평화의 비전이 구호만이 아니라 교육적 실천에 의해 담보될 때에만 평화적 통일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 나가고 세계평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세계적 수준의 특화된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라 하겠다.

6. 평화봉사활동의 국제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듬해인 2006년 12월에 제주도내 12개 자원봉사 단체로 구성된 제주평화봉사단(Jeju Peace Corps)이 발족되었다. 제주평화봉사단은 그동안 국내 기관 및 NGO,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연계하여 간헐적이거나 인도적 차원의 국제사회 지원활동에 동참해 왔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가 최근 발표한 '2008년 개발기여도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2개 부국 가운데 빈곤국 지원에 가장 인색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8년 12월 6일자). 이는 「세계평화의 섬」이 지구적 인간안보 차원에서 빈곤국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산실'로서의 사명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국제지원사업⁸⁾은 현실적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베트남과 몽골을 위주로 해서 그밖에 동티모르, 미얀마난민(태국 메솿지역), 스리랑카 등지에서 개발협력 및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구촌나눔운동(www.gcs.or.kr)'과 같은 국제지원단체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양길현, 2009).

제주도의 평화봉사활동이 향후 동남아 등지의 특정 빈곤국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양한 경험의 축적과 함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는 말

본고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향후의 과제로 제안한 6개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 담론 및 실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목표”라는 협의의 「세계평화의 섬」 정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지 5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종전의 '17대 사업'처럼 잡다한 사업 아이템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세계평화의 섬」 구현에 절실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세계평화의 섬」 추진체간에 보다 전문적인 고유영역을 설정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평화연구원이 동아시아의 평화·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주력한다면,

8) '국제지원사업'이란 “내전 혹은 저개발로 인한 갈등이 심한 지역에 자원봉사 형태로 들어가 장기 체류하면서 그 지역의 빈곤문제, 갈등문제에 도움을 주고 교육사업을 전개”(이기호, 2007)하는 형태의 평화운동사업을 지칭한다.

제주43평화재단 등은 43의 비극을 보편적인 인권 평화의 모델로 승화시키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는 제주도내의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활동에 역량을 쏟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의 섬」 추진체간의 이러한 역할분담은 결국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1991년 ‘평화의 섬’ 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한 것은 다름아닌 이에 대한 범도민적 열의와 결의였다. 이제 이러한 ‘평화의 섬’ 운동 초기의 대의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새로운 과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할 때만이 세계평화를 창출해 확산시키는 ‘세계평화의 허브’로서의 「세계평화의 섬」은 그 목적지를 향한 힘찬 향진을 멈추지 않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고성준외(2005),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연구총서1, 제주 : 온누리.
- 김기정(20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론적 모색”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 외역 〈서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문화』, pp. 113-118.
- 김차희(2003), “평화교육을 위한 한 연구 : 고등학교 도덕과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철학교육연구』 제19권 제32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pp. 197-222.
- 동아일보, 2008년 12월 6일자.
- 문정인(2009), “동북아 지역안보와 제주프로세스”, 제주평화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2007),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성과와 실천 전략』.
- 양길현(2009), “세계평화의 섬의 구현과 풀뿌리 참여방안 모색”,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 기념 정책세미나(2009. 1. 29) 발표논문.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양길현(2007), 『평화번영의 제주정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총서 3, 서울: 도서출판 오름.

연합뉴스, 2008년 12월 13일자.

이삼열 외(2001), “현대 평화연구의 동향과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이해교육』, pp. 150-175.

이종무(2009),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남북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워크샵(2009. 3. 26-27) 발표 논문.

정해준(2005), “현대 평화개념의 전개와 대안적 평화개념 연구”,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2008),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평화산업』, 서울 : 보고서.

진행남(2008a),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및 과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08-05.

진행남(2008b),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 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08-02.

최관경(2004), “평화와 평화교육”, 한국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14집, pp. 65-98.

한용섭(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한용섭 외, 서울: 나남, pp. 13-36.

Galtung, J(1996), *Peace by Peaceful Means*, 강종일 외역(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 들녘.

<http://www.jeju.go.kr>

여성과 평화실천운동

백진주

(제주YWCA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세계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를 여러 가지로 향유하는 수식어들은 우리들에게 '세계속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계평화의 섬' 워크샵에서 '여성과 평화실천운동'이란 주제를 놓고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펍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여성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많이 향상 되었다지만 아직도 오랜 가부장제의 유산과 남성중심의 문화로 인해 우리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충분히 내면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성운동의 궁극적 의미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평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 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요컨대 평화란 갈등의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 보다 오히려 여성이 갈등의 관계를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주체이자 실천의 일꾼으로서 더 적합하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관점이다.

“평화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갈통은 폭력에는 전쟁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등 가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인에 의해 행해지기 보다는 사회구조 자체가 가하는 구조적 폭력이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근래에는 더 나아가 문화적 폭력이란 개념을 소개 했다.”⁹⁾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

9) 진행남(2008), 『국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08-02.

에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야말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가장 목마른 에센스임을 웅변하는 셈이다. 하지만 작게는 개인에서 넓게는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기 까지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글이 던지는 핵심질문이다.

무릇 평화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회복이다.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자연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온전해짐은 삶의 자리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 도모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정의로운 나눔에 대한 운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평화·평화문화·평화교육에 대한 이해, △여성 운동과 갈등해결 △평화 만들기 실천 방안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평화·평화문화·평화교육에 대한 이해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사회 전반에 평화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1997년 유엔 총회에서는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을 평화와 문화와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유엔과 유네스코는 새 천년을 평화문화로 세우기 위해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소중한 평화문화에 대한 비전은 다음과 같은 가치, 태도, 전통, 사고와 행동양식을 지향한다.

첫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 인권, 생명을 존중한다.

둘째, 모든 형태의 폭력 거부, 대화, 협상을 통해 폭력적 갈등과 뿌리를 근절하고 방지하는데 헌신한다.

셋째, 현재와 미래 세대가 추구하는 개발과 환경적 요구를 공정하게 하는 과정에 통합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의 표현, 의사, 정보에의 자유를 인정한다.

여섯째, 국가와 인종, 종교, 문화, 개인 간의 자유, 민주주의, 관용, 연대, 협동,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대화, 그리고 이해의 원칙에 헌신한다.

이와 같은 평화문화의 비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이다.¹⁰⁾

사실 이러한 평화는 개인 내면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나라와 나라의 국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지구적인 생태계까지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클라우센이 제시하는 평화의 네 영역에 생태계를 포함하여 만든 것으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다섯 차원이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수렴되고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¹¹⁾

<표 1> 평화의 영역과 주제

차 원	대 상	주 제
개 인	개인 내부	자의식, 자존감, 좌절, 불안, 공포, 자유, 충동
공 동 체	개인과 개인의 관계	파괴적 공격성, 경쟁, 공동체 적대감과 친근감, 사회적 편견, 의사소통, 협력
국 가	국내적 관계	갈등해결, 사회적 계층,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 인종차별, 기회균등, 교육, 소비, 비인간화, 군대
국제사회	국가 간 관계	전쟁, 무기, 국제기구, 국가 간 불균형, 신자유주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아, 테러
생 태 계	지구적(global)관계	생태적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 핵

평화의 이념은 교육을 통해 실현해 가는데 평화교육은 신체에 대한 폭행, 테러리즘, 혹은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에서, 알리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막아보려는 적극적인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지역적,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

10) 정현백·김정수(200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pp.14-15.

11) 윤웅진(2001), 『서독의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p. 222.

뤄지는데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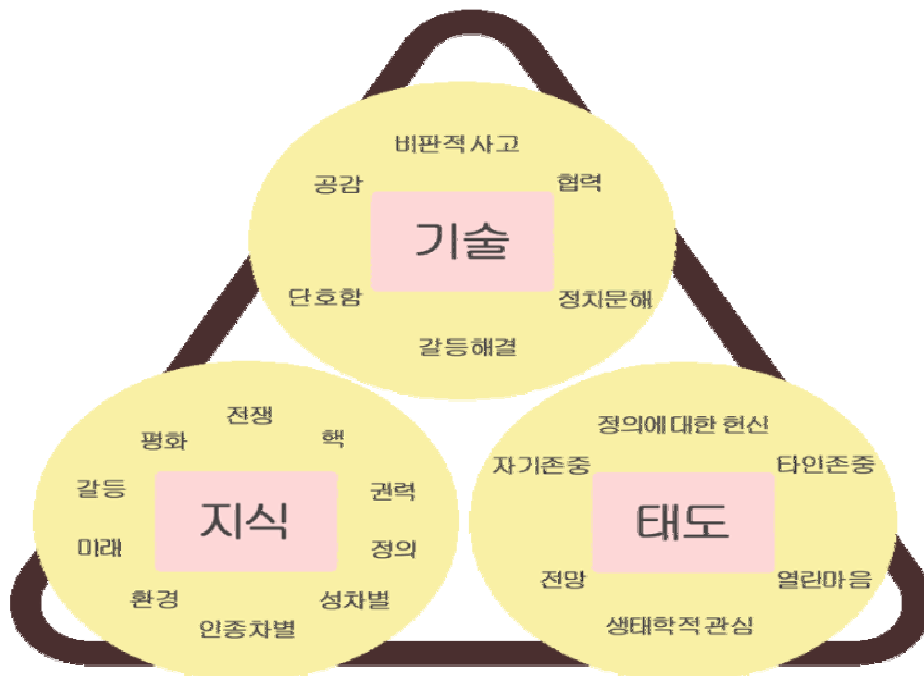
제 1부류 - 반파시즘교육, 세계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문화연구, 문화간 교류, 개발교육, 국제관계 교육, 군축교육, 해방교육, 생태교육, 세계연구, 국제이해교육, 쟁점교육, 상호이해교육, 정치교육, 환경교육 등으로 문제 지향적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 2부류 - 인식고양, 갈등처리, 갈등해소,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으로 기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제 3부류 - 공동체 형성교육, 공존을 위한 교육, 평화정신 교육, 간디연구, 도덕교육, 평화연구, 가치교육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²⁾

평화교육의 목표는 단기적 목표인 평화 유지에 의해 시작되어 중간 목표인 평화 만들기, 그리고 장기적 목표인 평화구축에 의해 성숙된다.

이러한 평화교육의 목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200 6 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전략을 수립한바 있는데, 이 내용은 향후 국내 평화 단체들이 지향해야 할

12) 고병헌(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평화의 개괄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첫째, 평화로운 삶을 위한 성찰과 삶을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내에서 평화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접근한다. 또한 일상적인 폭력을 뛰어 넘어 평화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풀뿌리와의 연대를 통해 생활 속에서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활동(예를 들면 놀이터 꾸미기, 학교 벽에 그림 그리기)을 진행한다.

둘째, 평화를 수행하는 사람들 스스로 평화마인드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마련과 더불어 자신의 내적 평화(영성과 깨달음, 수련과 명상, 평화생활 수칙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나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역사, 과학, 국어 등 기존 교육을 평화의 가치로 재해석한다.

넷째,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소통과 만남을 확산한다. 예로 평화활동에 대한 경험을 위한 시스템을 웹 사이트를 통해 마련하고, 평화 엑스포를 개최하며, 국제 평화 전문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 부문별 평화운동의 결합(노동과 평화, 인권과 평화, 경제와 평화, 통일과 평화)을 시도한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평화활동 과정 속에서 비폭력 실천 등을 통해 평화문화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삶 속에 평화모델로 평화마을, 평화학교 등을 세운다.

3. 여성운동과 갈등해결

제주에서의 여성운동은 1930년대 해녀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에 가족법개정운동, 소비자보호운동에서 사회봉사활동, 국제친선 등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1998년 호주제 폐지를 위해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을 시작,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여성이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권리 의식을 갖고 평화적이고 온건한 운동방법을 통해 이슈를 제기해 왔다.¹³⁾

제주여성은 거센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우며 섬을 지켜 왔다. 250여년 동

13) 제주국제협의회(2005),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p.242.

안 지속됐던 출륙금지령, 일제 강점기, 제주4.3사건 등 역사의 격랑을 헤치면서 좌절하지 않았고 꿈을 잃지 않았다. 돈벌이를 위해, 직업을 찾아 한반도의 해안선은 물론 멀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원정물질에 나서기도 하였다. 제주여성은 자유의지가 강하며, 생산적인 재능이 있으며, 시련에 맞서고 도전할 줄 알며, 현실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주체적인 자각의식이 강하고, 상대를 포용할 줄 안다.¹⁴⁾

제주여성의 대표적인 한 인물로 만덕을 두고 보더라도, 만덕은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을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육지 상인과 제주도민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는 철학으로 사업에 성공하였다. 만덕은 자신은 검소하게 생활했으나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넉넉한 마음을 지녀 자신이 아껴 모은 전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여 제주도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¹⁵⁾ 우리는 이러한 만덕의 삶을 통해 여성의 나눔과 평화실천운동의 지평을 넓힌 표본을 보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은 밖으로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평화만들기의 선두에 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여성들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 여성들의 금 모으기운동의 위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비근한 한 예일 뿐이다. 사실 한국의 '아줌마 파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잠재능력이라고 하겠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은 이라크에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평화의 물꼬가 터지길 간절히 바랐고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이성적 폭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파병철회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유엔은 1975년부터 1985년을 유엔 여성의 해로 정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평등·발전·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정부조직,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가했던 이 운동은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최초의 세계적 토론의 장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세계적 그림을 파악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갈구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역행하는

14) 제주국제협의회(2005),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p.90.

15) 제주국제협의회(2005),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p.156.

조건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제주지역에서만 해도 산북과 산남이라는 지역 간 갈등, 성차별,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갈등, 학생과 교사의 갈등,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갈등, 특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등이 그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나의 주장만 있고 타인의 생각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내 주장은 있으나 남의 말은 무시하거나 으박지르기 십상이다.

배타성은 평화를 역행한다. 이를테면 외지인이 진정한 제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질 때도 있다. 어릴 때부터 제주에서 살았는가 기준이 아니라 제주문화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때 진정한 제주인이 아닌가 한다. 세계화시대이고 이주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평화만들기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일확천금식의 기회주의 또한 평화를 저해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삶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는 줄을 잘 서면, 재수가 좋으면, 로또 당첨이면 만사형통이라는 듯한 한탕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희망을 갖고 삶의 현장에 다가가야 한다.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평화의 생명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치지향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에고(ego)다. 이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그들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다. 자기가 살아지는 것이 어떤 면으로든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며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에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쓴다. 그러나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영(spirit)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에고가 매력을 느끼는 물건에 흥미가 없다. 영은 평화롭기를 갈망한다. 어쩔 수 없이 경쟁할 때는 경쟁한다. 반드시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즐긴다. 그러나 결코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떠날 때가 되면 선선히 놓아준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한 짝의 예고와 영이 살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한 쪽을 살리고 다른 한쪽을 죽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도무지 평화를 맛 볼 수 없게 하는 예고를 어떻게 적당히 제어하느냐’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없는 헛수고에서 성취로 옮겨 갈 수 있을 것인가?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개인적 갈등에서 집단, 국가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갈등과 분쟁을 파괴적, 강압적,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 긍정적, 자발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을 포함한 모든 노력이라 하겠다.

갈등해결은 드러난 갈등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갈등 이면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그 잠재된 갈등의 뿌리를 변화 또는 제거시킬 때 진정한 평화적 해결을 이룬다. 평화적 갈등해결의 밑바탕이 되는 관점은 갈등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존재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있다. 갈등해결의 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협동,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이 우선적이라 하겠다.¹⁶⁾

4. 평화 만들기 실천방안

1) 나를 변화시키자

자신감 있는 나를 만들자. 내가 보아도 괜찮은 나, 개방적인 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자. 작업환경(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배치를 바꾸자. 월간계획을 눈에 띠게 붙이자. 그림이나 액자를 붙이자. 기분전환을 위해 나의 주어진 공간을 변형해 보자. 여행, 찾집, 노래방, 의상을 바꿔보자.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 어떤 곳에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자.

16) 박수선(2007), “갈등해결 워크숍”, YWCA사무총장전문교육과정 자료집, 대한 YWCA

“고·미·안(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을 생활화해 보자.

독서능력을 향상시키자. 지도자는 독서가다. 월 1권 책읽기, 토론하기를 실천해 보자. 독서는 개인적인 즐거움, 휴식, 넓은 안목, 직업상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즐거워서 읽고, 필요해서 읽는다. 폭 넓은 독서를 통해 인간은 성장하고 인생에 대해 통찰력을 기르고 인간적인 깊이가 생기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 간다. 책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쁨과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미소가 있는 사람이 되자.

일상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자.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내가 추구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평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내 안의 힘의 논리는 없는지, 시민사회에 내가 어떠한 평화의 기운을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하자.

나를 사랑하면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지도자가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나는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2) 너를 인정하기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장점을 칭찬해줘 만나는 사람마다 잠재력 증가를 해주자.

제주 사람들은 서로 가깝고 친분이 깊다. 싸움이 생기는 것은 서로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아는 만큼 격려하자.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자. 눈을 맞추고 손,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자.

3) 우리 공동체 만들기

평화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자. 평화 나무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걸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부어주며 음악회, 미술관을 함께 다니

며 정서와 감성이 풍부한 리더십과 고귀한 꿈을 키워준다.

조냥 정신을 본받아, 쌓이든 동전이든 저금통을 만들어 나누자.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운동방식으로 건강한 소모임을 꾸려 나가자.

4)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제주올레와 오름을 오르며 마음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자.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 메시지를 적어 희망나무를 만들어 본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가정에서 할 일, 사회에서 할 일을 적어본다.

자기성찰과 성장을 통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소통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자.

통일을 향한 관심을 갖도록 지역 여성들을 위하여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봉사 활동의 생활화, 작은 나눔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홋카이도의 ‘요사코이 소란 축제’는 홋카이도 대학생 한 명이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시작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200억 엔의 효과를 낼 정도로 성장했다.¹⁷⁾

지역 내 초등학교를 개방하여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워크숍을 통해 공동학습을 하여 소그룹으로서의 발전전략을 세운다.

제주 사회의 고유한 문화, 역사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발전시킨다.

5) 평화를 위한 활동

평화 기부금 나누기를 하자. ‘나와 내 여자 친구는 지난 2년 동안 책상 위에 올려 있는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세어 보았다. 10원, 50원, 100원, 500원, 수백 개의 동전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 모두를 합하니 16만원이 되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지폐로 교환하여 절반씩 나누어 강정 마을회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엔 평화 기부금을 부쳤다.’¹⁸⁾

6) 평화의 주체가 되자

사실 국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평화문제에 동참한다는 의식과 태도를

17) 와다 다카시(2008), 『소통과 나눔 그리고 새로운 마을』.

18) 제주의 소리, “나는 세계평화의 섬 주민이다”, 2009년 2월 1일자.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문제는 특정집단이나 계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과제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평화의 주체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내에 민주 시민의식과 평화의식을 제고해 나간다.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7) 적극적으로 듣자

의사소통은 전달할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다. 내용에는 정보와 지식을 포함하여 마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더 질 높은 인간관계가 지속되지만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된다. 또한 좋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우리의 의사소통을 가로 막는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 태도, 경험, 의사소통 스타일, 문화적 배경, 고정관념, 선입견, 지식 정도, 기분, 숨겨진 의도, 성별, 나이, 세대, 갈등의 접근 방식 등이 있다. 이 장애물을 인정하고 줄여가는 노력이 좋은 의사소통으로 가는 길이다.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듣는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주목한다.

8) 평화 네트워크를 만들자

여성운동도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예술, 문화, 관광 등을 통해 세계와 함께 교류한다. 국가적 차원과 민간교류차원에서 평화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자.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의도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하여 공동체적인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하자.

평화육성기금을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평화학교를 꾸려 전국적으로 네트

워크를 형성하자. 평화운동으로, 자기애와 자존감으로 타인과 깊은 상호교류와 친밀성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가 힘을 주는 운동으로 가꾸자. 평화 만들기를 위하여 워크샵을 갖자

5. 맺는 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어느 주교의 묘비문이다.

“내가 젊어서 자유로이 끝없는 상상의 나라를 뚫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어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좀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아,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 위해 자리에 누워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평화실천운동은 우리 모두의 개인적 결단에서, 타인을 인정하는 곳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에 나와 완전히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름이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며 타인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면 평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타인을 내 생각 내 마음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긴다.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무를 보며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한다. 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목재로, 또 한 사람은 가족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뽕감으로, 또 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생명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면서 돈이나 뽕감을 넘어선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어떤 다름을 느끼는 지 살펴보자.

‘생명’에 대해서 가격과 가치, ‘소유’에 대해서 사유와 공유(이 세상은 우리 모두의 것), ‘인식’에 대해서 차별과 차이(다름의 인정), ‘관계’에 대해서 고통

과 소통(함께 계획하고 점검하기 인정하고 격려하기), ‘관점’에 대해서 절망과 희망(오늘, 내일, 미래 이야기하기)을 떠올리듯 상반되는 개념을 떠올린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 폭 넓은 시각으로 타인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생각해보자.

평화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의 관계를,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네가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평화운동이 세상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한다. 평화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 참고문헌 >

고병헌(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제주국제협의회(2005),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박수선(2007), 갈등해결 워크숍. YWCA사무총장 전문교육과정, 대한YWCA연합회.

양길현(2008), “세계평화의 섬의 구현과 풀뿌리 참여 방안 모색“,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 발표 논문.

윤응진(2001), 『서독의 평화교육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정현백, 김정수(2002),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주의 소리(2009), “나는 세계평화의 섬 주민이다“, 2009년 2월 1일자.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진행남(2008), 『국내외 평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08-02.

평화 심성프로그램(2004)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YWCA(2000), 『제35회 전국대회 자료집』, 대한 YWCA.

토 론 요 지 문

... 원탁토론자 (가나다순)

- 강 근 형 제주평화학회 회장 (제주대 교수)
강 문 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강 인 숙 제주평화통일포럼 연구간사
김 동 욱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김 용 범 국민대 겸임교수 (성곡학술문화재단 이사)
김 일 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차장
서 명 숙 제주올레 이사장
양 길 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제주대 교수)
오 영 훈 제주도의회 의원
이 광 진 제주대 교수
이 신 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한 립 화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허 정 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한반도와 동북아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강 근 형

(제주평화학회 회장, 제주대학교수)

진행남 박사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진박사님의 발제문에서 평화의 개념, 평화의 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평화의 섬 지정의 원래 취지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평화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개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안보 등까지 자세히 분석해주셨습니다.

토론자는 적극적 평화가 국내의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들 사이에도 소극적 평화(peace keeping) 단계와 적극적 평화(peace making, peace building)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소극적 평화단계는 상호 억지체제를 마련하여 서로가 침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단계를 지칭합니다. 반면에 적극적 평화단계는 국가간에 협력안보가 이루어지고 관련국들 사이에 안보레짐을 형성함으로써 상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군비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국가가 자의적으로 폭력적 수단(전쟁 및 테러 등)을 동원하여 타 국가를 침략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평화 질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화된 평화 단계에서 관련국간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평화체제의 수립이나 동북아에서의 다자간평화협력체제의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집단안전 보장체제의 수립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적극적 평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세계평화의 섬 구상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제주가 한반도의 변방으로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있어 중심으로서의 할을 수행하겠다는 주체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는 지방적 수준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 제주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자부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역할은 제주가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즉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의 신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화된 평화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판단입니다. 중앙정부가 200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제주가 이러한 역할을 적극 하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평화의 섬 지정선언문 실천공약 2항에서 "제주도를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개념 정의한 "제주도를 제네바와 같은 세계평화 담론 및 실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목표"라는 세계 평화의 섬의 개념은 토론자가 주장하는 넓은 의미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의 평화의 섬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섬의 개념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정의하고, 이 의미에 알맞는 사업에 특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55조에서 제시된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 박사님이 제안한 여섯 가지의 향후 과제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평화의 섬을 정의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설치 문제도 평화의 섬과 그리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의 강화와 관련, 우리가 해군력을 조금 증강하는 것은 그리 평화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소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17% 이상 증강하고 있고, 핵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근해 방어전략에서 연안방어전략으로, 더 나아가 인도양과 괌 지역을 통제하는 대양해군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000해리 방어전략에서 1500해리 방어 전략으로 해양 통제 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해상수송로(SLOCs)를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석유의 99%, 수출입의 7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라카 해협, 동지나해 등을 거쳐 대한해협으로 오는 해상수송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히로시마에도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의 섬이라고 해서 비무장 평화지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기지가 있어도 관련국간의 교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군기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평화교육 문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평화의 섬 실천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아카데미’도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되며, 국제평화센터에서 평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대상 평화교육은 제주대학 등 도내대학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양과목으로 평화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 한중일 FTA나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이것의 사무국을 제주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해양표류 정신을 구현하는 사업을”

강 문 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프랑스 학자가 그 지역의 고유브랜드를 찾으려면 당신들의 족보에서 찾으란 말을 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에 관해 이 충고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 이웃 국가들과 공통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 봤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섬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트랙 속에 속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과 관련 없이 제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실천 가능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류와 협력, 평화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고민해 봤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국제기구로서 육성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다.

해양표류정신을 구현하는 사업을 생각해 봤다. 생소하고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술한 해양항해와 함께 표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의 이케오치 사토시 교수에 따르면 18세기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식기록만 409건이며 표류했던 사람은 수천 명이며, 일본에 남아있는 표류 기록이 약 천 건이 되는데 거기 포함된 조선인이 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한국에 표류했던 일본인이 100건이 된다고 한다. 제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양활동이 왕성했고 그만큼 표류 기록도 많이 나타났다. 조선조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광둥성, 해남 등에 표류했었고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와 같은 여러 도시에서 베트남, 대만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동북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표류한 기록이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의 하멜이 제주에 표착했었고, 19세기에는 영국 상선이 제주에 표착을 했는데 제주 사람이 구하고 선박과 함께 일본에 돌려 보낸 기록도 있다. 문제는 이런 표류역사는 과거에 박제된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

속되고 있다.

매년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보면 제주항이라든지, 안덕 등지에 수백 척의 선박들이 피난을 온다. 피난선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실종되거나 사고가 나는 일도 지금도 여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제주도의 표류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기록이 남겨있는 지가 중요하다. 오키나와 등의 도시에서 공히 나타나는 기록은 상당히 표착인들을 잘 대우했다는 것이다. 겨우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수개월동안 머물게 도와주고 대접하고 의복에 선박까지 만들어서 국경까지 데려다줬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인도주의 정신, 평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습과 전통들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도 이런 정신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일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오돌또기 민요는 표류에서 비롯된 노래이다. 제주인 김복수가 안남으로 표착했는데 유구상인이 일본 쪽으로 왔고 다시 데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있다. 최부의 표해록은 우리나라 해양문학의 서사시적인 정수라고 얘기하고 장한철의 표해록은 해양문학의 걸작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다. 하멜표류기는 더 설명할 것도 없다. 이렇게 풍부한 기록을 갖고 있는 해양문학을 어떻게 평화사업으로 접목을 시켜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제주도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제주도와 연안도시의 관계로 접근해보자. 동북아시아 쪽만 해도 일백 개를 훨씬 넘는 도시가 있을 것이다. 그 도시들과 표류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정이 10년 가까이 연안 시도현 회의를 가져왔다. 시도현 모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의 정신들을 평화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선언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표류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동남아, 환태평양, 지중해까지 넓혀나가면 이 문화는 공감할 만 한 일이고 제주의 보편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예산도 1~2억 정도를 꾸준히 투자 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가능해지며 심포지엄, 세미나들을 하며 우리 문학을 선전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전문가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그런데 표류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할 것이다. 그 후손들은 지금도 제주에 살고 있기에 삼백년, 오백년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것이다. 언론의 초점도 모을 것이고, 제주의 평화로운 이미지를 확립시킬 수 있다. 오키나와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고, 평화에 관련된 사람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겠다 생각했다.

해군기지가 만약 건설된다면 민군복합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곳을 방문하는 작은 선박들을 고쳐주고, 그 선원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건강하게 취향하게 도와주도록 군함선박세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제주에 가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세계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기억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가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외교가 중요해 지고, 도시 중심으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제주다운 사업을 하면서 연안 도시들을 대상으로 외교, 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제주에 세계적인 평화대학원 설립해야”

강 인 숙

(제주평화통일포럼 연구간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된지 4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과업 내지 사업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 또한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개념조차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범주를 확정하기란 애당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은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범주를 확정했다고 보시는지요?

“평화”에 대한 개념과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본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간단명료하게 쉽게 요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했을까 의문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일궈나가기 위한 허브(hub)를 제주도에 구축하려는 미래지향적 정책의 가시화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한 것이라는데, 이처럼 원대한 비전에 기초한 국가적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그 동안의 노력으로 17대 사업의 추진상황에서 보듯이 성과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세밀한 구현 목표를 세워 도민이 평화로운 제주를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것이 나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평화의 섬”이 되기 전에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제주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가 ‘평화로운 섬’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천적 프로젝트를 개발해야한다.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보다 명료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대 사업 이외의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업도 종전처럼 산발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평화 대학 또는 대학원 건립,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평화대공원 또는 평화 단지 조성,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충, 간판과 건축물 미관, 가로수와 안내판의 개성을 살리는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 건설, 외국인을 위한 배려(관광서 외국어 서비스, 교육문화시설 확충 관광지 및 병원 등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판 설치) 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담긴 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확충(실버산업과 연계 가능) 생명과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 건설, 충분한 주차시설 확충(관광서나 학교의 주차장 시설 동네 주민에게 휴일과 야간 개방)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모색 등이다.

‘세계평화의 섬 모형’을 △비무장 평화지대화 모형 △경제특구화 모형 △국제교류·협력의 거점 모형 △인권/생명 상생 모형 등 4가지로 나누어 재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주도를 비무장화 내지 중립지대화 하자는 ‘비무장 평화지대화 모형’은 중앙정부의 승인과 주변국의 협력 내지 국제적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제주도로 하여금 지역평화를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 모형은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바꿔 말하면 결국 제주에 완전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지.....

도가 추진해온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의한 17대 사업”의 범주별 분류 및 추진 상황 분석을 보면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사업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주 43 추모일 지정 역시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 사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유보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 국제기구 설립 및 유치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제주43 추모일 지정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세계평화의 섬」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의 제안 중에서 지금까지의 구현 사업 문제점을 감안하고,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협의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있는 6개의 과제 중 한중일 정상회담의 유치와 평화관련 국제기구의 유치, 제주 프로세스의 제도화는 도민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는 도의 행정직,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자들,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이 함께 손을 맞잡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간다면 성사시킬 수 있는 과제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장기적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에 동의하며, 인도적 지원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제주산 마늘 임가공 경험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제주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이 잘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정의 재정 지원은 물론 전 도민의 호응과 참여가 있도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도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미 뿌려진 평화통일의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리라 생각한다.

세계적 수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화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중속으로 파고드는 차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특징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발되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시대를 앞서나가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만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요컨대 평화의 비전이 구호만이 아니라 교육적 실천에 의해 담보될 때에만 평화적 통일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 나가고 세계평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세계적 수준의 특화된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라 하겠다.” 지적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세계적인 평화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화 아카데미 운영도 평화대학원에서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것이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라고 보여 진다.

평화봉사활동의 국제화 추진에 관련해서는 2006년에 발족했다는 제주평화봉사단의 국제사회 지원 외에도 도내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세계평화의 섬」추진체인 제주평화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세계평화의 섬범도민실천협의회」 등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달려가는 마차의 마부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으로 열정적인 마음과 의지를 갖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역량을 쏟아부어줄 것을 줄 것을 바란다.

“갈등해결·소통활성화 프로그램 개발해야”

김 동 욱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평화는 회계학적으로는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회학적, 행정학적으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선 회계학적 접근으로 평화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함. 즉 미래에 경제적 효익은 있지만, 다만 인적자산과 같이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기록을 할 수 없는 자산임.

특히,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무형자산은 그 특징 때문에 인식 및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과다평가로 인한 회계정보의 왜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까다로운 인식기준을 충족시켜야 자산으로 인식을 허용하고 있음.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확실성이 클 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됨. 평화라는 무형자산이 명실 공히 제주도의 미래에 효익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진행남 박사님께서 제시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유치’, ‘평화관련 국제기구의 유치’, ‘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 ‘세계적 수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화봉사활동의 국제화’ 사업에 동의함.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업은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임. 제주도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도 필요하고,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외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갈등구조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노력도 무엇보다

다도 필요함. 제주도민의 자체갈등을 풀 수 없는 자치역량으로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외적인 사업에 명분이나 결집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

최근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평화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 또한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다의적이어서 이를 단적으로 개념화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주요 학자 및 연구들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평화의 섬’ 추진 등과 관련된 진척된 내용들을 보면, 지방정부 통제와 사회적 권력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됨.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그 사업과 프로그램에 직접적 이해가 있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회의결과의 핵심만 전달하는 언론매체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형태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도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즉, 평화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참여 유형이 정부통제 중심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 정책들이 이미 결정된 다음에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형식적인 참여가 될 우려가 높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세계평화의 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무관심 내지 참여의식의 약화로 이어지며, 이는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양한 갈등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정책의 비용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세계평화의 섬’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참여는 과잉인 반면, 민주평화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참여는 매우 부족한 참여의 양극화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소통의 실패가 문제임.

‘평화’라는 아이콘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산화 시키는 데는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과 제주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한 요소인 ‘소통’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함. 갈등해소, 소통, 대화, 협상의 방법의 주제를 다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은 많이 보아왔음. 제주도의 현안과제는 빠름의 미학인 개발논리와 느림의 미학인 평화가 공존하고 있음. 이미 우리 제주는 강정항 해군기지 건설의 개발논리와 ‘세계평화의 섬’의 이념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각종 제주도 현안에 대한 각자의 소리는 아직 높기만 함. 제주도민이 ‘세계평화의 섬’이란 슬로건에 맞는 낮고 합리적인 소리의 대화와 타협의 기본적인 민주시민정신이 뒷받침이 없다면 세계평화의 섬은 우리들만의 구호이면서 한 순간의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음.

현대사회 대부분에서 요구하는 빠른 속도는 창조력의 근간이 되지만 사회를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음. 언젠가부터 빠른 속도에는 비교적 적응을 잘하지만 느린 속도에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은 이런 각각의 다른 속도감에 심적 조절이 필요함.

세계평화의 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제주인의 집약된 목소리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느리지만 꾸준하게 구축해 나간다면 제주의 세계를 향한 평화의 외침은 조금씩 조금씩 지구 구석구석 까지 스며들어 평화라는 무형자산이 지금 우리세대는 아니지만 차세대에 제주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임.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제주사회와 제주인 삶의 알찬 내실부터 다져야”

김 용 범

(국민대 겸임교수·성곡학술문화재단 이사)

발제논문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평화의 개념을 재검토 하면서 내 소견을 몇 마디 밝히고 다음에 새로운 실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말로서 자리매김되어 있으나 그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주평화연구원 진행남 연구위원의 발제논문은 그런 점에서 평화의 개념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견해와 그 동안 논의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평화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그의 논문은 평화란 단어가 지닌 텅 빈 개념(the emptiness of meaning)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아직 불충분한 개념정리라고 볼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점을 솔직히 시인하기는 했다.

평화란 언어기호의 의미 또는 개념에 대해 기술하기에 앞서 먼저 듣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적 사례를 들고자 한다. 가든(garden)이란 말의 원초적 사용례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이 아닐까 한다. 이후 가든은 왕궁의 정원, 귀족 저택의 큰 정원, 서민 주택의 작은 정원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있었던 가든은 서민의 정원으로서 옮겨오는 동안 인간의 작위(作爲)와 온갖 고안(考案 design)이 첨가된 아름다운 인공가든으로 탈바꿈했다. 가든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이번에는 그 의미가 돌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회전했다. 가든은 ‘초원가든’(제주시 신제주 소재), ‘삼원가든’(서울 강남구 논현로변에 소재) 등의 고급식당으로 출현했는가 하면 도시 교외에서 시골분위기를 한껏 자아내는 전원(田園)레스토랑으로 변질되었다. 에덴동산의 자연 상태에서부터 인위적

인 전원레스토랑으로 탈바꿈한 garden의 변신은 언어기호의 변화무쌍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즉 언어기호는 고정된 실체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평화란 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자리--제주대 국제교류센터의 워크샵 장소--에 와서 보니까 평화란 언어기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발견했다. 앞서의 토론자들은 발제논문에 열거된 개념 외에도 아주 폭넓은 평화의 의미를 제시해주었다. 오영훈 도의회의원의 “아픔의 치유”(4.3을 둘러싼 대립갈등과 해군기지항 유치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 등),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의 “속도 · 경쟁 · 소음 · 오염으로부터의 벗어남”, 강인숙 제주평화통일포럼 연구간사의 “골고루 어울림”, 이광진 제주대 교수의 “(유기농에서) 자연과의 상냥한 대화” 등이 다채로운 의미들의 일부이다. 하나의 단어가 왜 이처럼 다양한 의미의 영역으로 진화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평화라고 여기는 상태 즉 ‘평화’라는 단어로 표시하는 것의 실제 대상(object)과 그 평화상태=대상을 언표(言表)하기(represent) 위해 사용하는 단어=언어기호(language sign)--구체적으로는 시니피앙(signifiant)--사이에 언제나 불일치 또는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평화 상태를 언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화’라는 언어기호는 갖가지 갈래의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평화’라는 언어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평화’는 당초의 의미를 차근차근 잃기 시작한다. 좀 더 친근한 말로 표현하자면 ‘평화’라는 언어기호는 뜬 구름 잡는 듯한 말이 되어 우리 생활 속을 떠돌아다닌다. 고정된 실체적 내용(개념)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달려들면 ‘평화’는 저만치 달아나면서 자유자재한 곡예를 부린다. 이 점에 관한 한 가든과 평화, 두 언어기호는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가든의 의미변질과 평화의 그것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평화의 대상과 그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기호로서의 ‘평화’가 다름에도 사람들은 흔히 그 둘이 같다고 착각 또는 오인한다. 그 둘이 다르다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기호로서의 ‘평화’는 실은 뜬 구름 같은 것일 뿐 아니라 판타지(fantasy)일 수도 있다. 우리는 평화의 실체를 얘기하면서 그 것을 재현한다(represent)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화의 판타지에 관해 애

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평화’는 현실에 실재하는 듯하면서도 실은 언제나 그것의 부서지기 쉬운 현전상태에 대한 판타지인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평화’의 의미는 한 가지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그리고 이미 ‘텅 비어’ 있는 상태로서 유동하는 것이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뒤집어보면 언제든지 그 빈 곳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음을 지시한다. 그래서 ‘평화’란 언어기호는 ‘의미가 텅 빈 판타지’이므로 우리는 평화를 얘기할 때 어느 누구나 ‘텅 빈’ 상태 안에 어떠한 의미든지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텅 빈 의미의 용기 안에 자꾸자꾸 새로운 의미를 채워 넣기 때문에 ‘평화’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실로 다양한 색깔로 된 의미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평화’라는 언어기호가 지닌 이러한 성격--‘평화’라는 언어기호가 지시하는 대상과의 차이와 다름(difference)--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계평화의 섬’이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 위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는 소극적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평화에 관한 논의는 이런 소극적 개념을 뛰어넘어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심지어는 인간안보까지를 포괄하는 대단히 넓은 범주를 망라하는 데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평화의 개념이 소극적 개념에서 사회구조 차원의 ‘적극적 평화’로 확장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생존 및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자세는 일단 평가할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의 개념이 이처럼 확대 · 포괄되는 것이 과연 ‘적극적 개념’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

평화의 개념이나 의미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언급되는 ‘전쟁이 없는 상태’, ‘내분이 사라진 상태’는 제쳐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간 또는 집단들 간의 충돌과 의견대립에서 벗어난 상태’, ‘범죄 · 기아 · 전염병 · 자연재해 등의 치안 · 사회안전 문제에서 벗어난 상태’, ‘불안 · 고민 등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지적한다. 이러한 평화의 의미는 언제나 ‘무엇 무엇으로부터 벗어남’(free from something)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그 ‘무엇’ 즉 something은 우리 인간이 배척하려는 대상, 피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전쟁, 내분, 갈등, 범죄, 기아, 전염병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기피대

상들을 우리는 평화에 대한 저해요인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평화는 그것에 대한 저해요인들이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사회적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평화는 그 자체로서 실체적 내용(substance)을 지닌 용어로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제거된 상태로서 설명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화라는 말은 그렇게 밖에 정의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이러한 상태가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태'를 우리가 과연 언표(言表)할 수 있을까? '물결이 가라앉은 듯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경우에도 '물결이 가라앉다'라는 말 자체는 평온한 상태를 저해하는 요인이 제거된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평온한 상태'를 정의하려 할 때에도 어김없이 그 '평온한 상태'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반드시 언급하고서야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에서 평화라는 말은 '적극적 명칭'(positive term)이 아니고 언제나 그것의 저해요인들을 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극적 명칭'(negative term)이라고 나는 부르고 싶다. 전쟁 · 폭력 · 재앙 · 각종 사회적 불안 등과의 차이와 다름(difference)을 언표(言表)하는 '소극적 개념'일 뿐이라는 뜻이다.

평화의 개념을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전쟁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이고 인간안보까지를 포괄하는 평화 개념은 '적극적 평화'라는 사고방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온갖 요인들이 없어지는 상태도 인간이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것 역시 논리상 평화의 '소극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평화란 단어는 자기 성립(또는 달성)의 실체적 내용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언제나 그리고 이미 남의 존재를 전제하고서야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용어로 정리하자면 평화는 언제나 타자(他者 the other)의 존재를 전제로 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삼는다 함은 타자의 부재(不在 absence)와 더불어 평화가 현전(現前 presence)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삼아야 평화가 있게 된다는 이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명확히 나의 소견을 밝혀둬야 하겠다. 나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사회적 폭력을 일으키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를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두고 싶다.

평화란 말 자체가 언제나 그리고 이미 ‘적극적 명칭’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면 ‘적극적 평화’의 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해지리라고 본다. ‘적극적 평화’의 추구는 결국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의 ‘적극적인 제거’로 귀착되는 것이다.

평화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진 위원도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들어 제주도내에서 너와 나 가릴 것 없이 애용되고 있는 ‘평화’ 두 글자가 관형사로서 첨부된 각종 ‘평화사업’과 ‘평화산업’의 평화가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레 나오리라고 본다. 관형사로서의 ‘평화’란 말이 어지럽게 등장하는 현상은 ‘평화’란 언어기호가 지닌 긍정적 가치를 선호한 결과 달리 말하자면 ‘세계평화의 섬’ 선포 이후 ‘평화’란 기호가 지닌 상품으로서의 높은 교환가치에 기댄 결과 ‘평화’란 관념(notion)이 마치 어떤 실체를 지닌 것처럼 착각하는 실체화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실체화의 오류는 그 말의 사용자와 수용자 쌍방에서 다 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평화의 섬’ 선언 이후 무성하게 나타난 ‘평화사업’과 ‘평화산업’이란 것은 ‘적극적 평화’ 개념의 외연 확장이라기보다는 <공허한 의미를 지닌 평화라는 언어기호>의 유행적 난무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도민들의 생각이나 의견표시에서 평화란 말이 예사로 애용되는 사회적 현상을 굳이 나쁘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며 또한 ‘평화사업’과 ‘평화산업’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는 ‘평화의 섬’을 만드는 데 유효한 것들도 있음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평화란 말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제주 섬이 평화 브랜드를 얻는 부수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다만 ‘평화’란 언어기호가 약방의 감초처럼 어느 말, 어느 사업에나 따라붙는다면 평화의 긍정적 가치는 저감될 수도 있으며 그와 동시에 ‘평화’라는 말이 공허한 기호로서 박제(剝製)되어 형해화(形骸化)하거나 전혀 엉뚱한 의미의 옷을 입고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영어 가든(garden)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의미가 변해버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평화’가 어느 것에나 첨부되는 것이라면 가든이 레스토랑으로 변해

머리뚱 ‘평화’는 정치운동단체나 이익집단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구호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평화의 섬’ 선언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모든 사업들이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우선순위의 엄밀한 설정,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추진 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만 정치적 전 시효과나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의욕과잉에서 빚어진 사업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차분히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세계평화의 섬’을 위한 프로젝트도 여기서 전혀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세계평화의 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념 정리를 하려면 실현가능한 사업의 선정과 우선권의 부여를 재검토하는 정책적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작적(操作的)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라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평화의 의미와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평화’담론이 거창해지면 질수록 ‘평화’의 내용은 자칫 그만큼 공허해지기 쉽고 사업의 성과도 걸치레에 그치거나 용두사미로 끝날 소지가 있다.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세계평화 좁게는 동북아 평화의 중심적 위치를 가까운 시일 안에 차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의욕과잉이 아닐까 한다. 지난 정권시절에 걸핏하면 ‘무엇 무엇의 중심(center 혹은 hub)’을 만들겠다는 정책발상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한낱 정치적 구호로 그치고 만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는 꼭 그 ‘중심’을 차지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뒤집어보면 스스로가 주변이나 변두리(periphery)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떠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욕과 포부 또는 꿈을 갖지 말자는 뜻에서가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 제주사회와 제주인 삶의 알 찬 내실을 다지자는 뜻에서 하는 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꿈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요롭고 보람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주인 삶의 알 찬 내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젊은 리더회의, 세계적 행사 구상을”

김 일 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차장)

◎ 제주평화포럼 특별세션으로 젊은 리더 회의 개최

예를들면 UN 청소년대표자회의 (United Nations Youth Leadership Summit)가 매년 뉴욕에서 개최되는데 192개국에서 2명씩의 젊은 리더가 모여 세계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 이와같은 방식으로 세계 주요대학과 국내 주요대학의 학생회장 및 여학생회장 등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제주선언(가칭)을 발표하는 것. 이러한 회의는 대중적이고 21세기인 젊은 리더들에게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홍보하고 구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함. 참여한 젊은 리더가 향후 그 국가의 리더나 정책결정자가 되었을 때 제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대효과가 큰 만큼 젊은 리더 회의 개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세계적인 대회나 행사 육성 및 개최

- 보스톤 마라톤대회<미국의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해 4월 3째주 월요일에 개최>
→전 세계 마라톤 동호회 회원 10,000명이상 참가.
- 히로시마 평화의 날<1945년 8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6일 개최>
→전 세계 14만여명이 참가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8년 6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이는 전국대비 1%라는 유형적 자산의 한계의 측면을 뛰어넘는 무형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과 더불어 평화라는 문화적인 요소를 추가한 문화적 행사(영화제 등)나 스포츠 대회<국제울트라 마라톤, 국제철인경기>를 세계적인 대회나 행사로 육성하여 개최하는 방안.

“속도, 경쟁, 소음, 오염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

서 명 숙

「제주올레」 이사장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평화의 섬에 관해서 그 동안에 이론적이든지 정책적인 입장에서든지 행정이든지 사업의 현장에서든지 많은 경험과 일을 해 오신 분들이다. 제가 제주도에 길을 내면서 220km 제주올레길이 나왔는데 처음 길을 낼 때부터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 그런 주제를 내면서 평화의 올레, 치유의 올레, 행복의 올레, 이런 컨셉을 기준으로 했다.

제주도 길에 대한, 제주도 자연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 국방중심으로 거대하게 얘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언론인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직업 때문에 강요당하는 발언이나 글을 써야하는 적이 많아서 제주도에서는 내 몸으로 밀고 나가지 않은 문제, 내가 가슴으로 터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하지도 않겠다, 그럴 시간이면 길을 내는데 한 시간을 더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 2년간 살아왔는데, 그런 나머지 강정문제도 굉장한 심리적인 부채감이, 물론 누군가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강요한 바도 아니지만, 저희 올레 7코스가 강정을 지나간다. 늘 육지 사람들 데리고 오면 기업체, CEO, 세미나 온 사람, 예술가들이건 강정 마을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나부끼는 노란 깃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했고 저는 국가적 안보와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뿌리 뽑히는, 마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뒀야 할지 제주도 전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지하고도 매우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길에만 꽂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을 보면서 오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외지 사람들이 과연 제주가 매일 세계평화의 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한 뉴스는 강정이고 매일 싸우는 얘기였다. 육지에서 전화 받고,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올레 오고 싶다는 개인적인 얘기 외로는 제주에 대해서는 강정에 대해서 묻지 않고, 무슨 버자야 그룹에 대해서든 다른 어떤 걸 묻는 게 아니라 강정 도대체 왜 그렇게 시끄럽느냐, 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걸 물어본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마을 사람들이 엄청 분열돼 있고, 관민이 분열돼있고 강정과 다른 마을이 분열돼 있고 '저것 좀 받아주지',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야' 강정은 여러 가지로 다차원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 제주도가 진짜 제주 프로세스, 동북아 안보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강정마을 엄청난 방법으로 해결 되더라도 찬성 쪽이든, 반대쪽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든지 굉장한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을 남길 거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학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강정마을의 시작부터 정책을 설득하는 단계, 정책결정과정, 마을의 입장결정과정, 투쟁과정 이런 모든 부분에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을 잘못 풀어나가서 갈등과 엄청난 상처들을 냈는지 강정 리포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다음에 같은 일들, 앞으로도 수많은 강정들이 제주도에서 개발에 대한 욕구와 보존에 대한 상충되는 욕구가 늘 존재하는 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전부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화라는, 그런 돈이 평화랑 직결되지도 않는데 포장만 평화라는 라벨을 붙여서, 뭐 따지고 보면 평화랑 상관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당장 더 우선순위의 사업조차도 혼란스럽게 할 경우에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좁혀 버려서 평화라는 큰 용광로 같은 개념에서 여성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현대적 평화, 과거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폭력, 이런 것도 다 평화의 의미이다.

동북아? 저는 지금 논의가 너무 정부차원에서 선포돼버리고 그 다음에 논

의과정에서 십년동안 너무 학자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지 저는 계속 논의를 들으면서도 물론 평화의 섬이라는 주제는 잘 잡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논의의 전개과정과 실천과정에서 너무 상충권적이고 너무 국제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화의 섬이 뭐냐고 육지에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인지 모른다. 한국 사람이 제주가 평화의 섬인지 모르는데 세계를 향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메시지를 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주도의 상처 받은 역사, 4.3이랄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굉장히 국제포럼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다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일방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념관 지어서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돈들이 기념관 특정건물 이런 거 짓는데 많이 사용해서, 만덕기념관 절대로 크게 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덕이란 할머니 자체가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퍼준 사람이고 결국 지금 와서 현대인들이 만덕 기린다고 큰 박물관 만든다고 그 분이 꼭 좋아하신다고 보진 않는다. 오히려 왜 박물관을 왜 조촐하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만덕이 이 세상에 많이 남기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조촐한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뜻을 기린다면 조촐함도 해소될 것이고 내용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채워 넣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만덕이라는 인물을 육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느냐가 관건이지, 외국 사람들은 기념관 크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외국에 가면 생가 같은 것을 얼마나 초라하게 해도, 그 초라함 때문에 오히려 눈물 흘리고 반하고, 이중섭 생가도 1.4평 그 방이 고대로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업이 만들기 위주이고, 밀랍인형들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밀랍인형을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며 밀랍인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얻을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사업을 되도록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뭘 만들지 않도록 내용이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의미망은 좀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돈 안드는 평화의 섬에 대한 포지셔닝 설정을,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높은 사람들, 상충권들, 외교 위주, 동북아, 이런 위

주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부터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평화의 개념 말이다, 평화의 개념은 누가 아프지 않고 치유 받는 그런 거 얘기하시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속도, 경쟁, 소음, 오염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평화는 옛날엔 4.3, 이런 전쟁,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평화지만, 현대인들한테 요즘 중·고등학생한테 4.3을 아무리 설명해도 더군다나 육지 사람들에게 4.3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다.

그런 부분까지도 짚아놔서 제주도가 현대인들한테 평화의 섬이라는 폭넓은 확장개념으로 갈려면 과거는 과거대로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되 그 사람들에게 왜 평화의 섬 제주도를 찾아야 되는지, 왜 제주가 평화의 섬인지, '제주도는 육지에 있는 속도 경쟁 소음 여러 가지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섬이다.', '열심히 산 당신, 복잡한 도시에서 사는 당신, 이 제주도에서 늘쫘 늘쫘 간세다리로 좀 쉬멍 가라.' 그게 평화 아닐까?

현대인들한테 평화는 바쁨, 속도로부터의 탈출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 공지영의 그런 소설, 힘내라 응원, 격려와 응원과 떨어지면 쉬어갈 곳이 필요한데 막 여기서 매일 국제도시 얘기하고 동북아 평화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거 막 머리 아파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은 그런 일대로 상층권에서 하시더라도 수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제주도가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지, 왜 평화의 섬인지 꾸며내지 않아도 제주 온 사람한테 잘만 제시되면 굉장한 평화의 섬이다. 우선 공해 없지, 차가 아무리 많아도 인구가 적으니까 차가 많이 안다닌다. 도심들은 아침부터 전쟁을 치르지 않느냐, 출근전쟁이라고 하면, 옛날처럼 총 들고 칼 들고 와야 전쟁이 아니다. 입시, 출근 전쟁, 승진 전쟁, 이런 사람들에게 다만 며칠이라도 와서 여기서만큼은 이 섬에서만만큼은 평화롭게 간세다리가 되어도 좋다.

그런데 제주도가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와도 잘도 버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시가 된다. 와도 집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게 막 '빨리 내리서 읍서 갑서' 막 하는데 조금 제주도에서 고급한 관광이든 배낭 관광이든 정말 그 사람들 제대로 쉬고 휴식할 수

●“속도, 경쟁, 소음, 오염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

있게 해야 한다. 서귀포 서북박물관 130억원 들여 지어서 하루에 다섯 명 온다. 제발 뭘 짓기 전에 정말 평화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슬로건 내걸고 너무 짓는 건 아닌 거 같다. 예산을 그런데 쓰지 말고 좀 내용을 갖고 내용이 있는 예산으로 내용을 확장시키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평화영화·동남아 문화원·김만덕 평화사업 추진을”

양 길 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제주대 교수)

우선 다른 토론회 장에서도 많이 듣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평화의 섬의 개념이 뭐냐”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무엇이냐고 개념 규정하면서 사랑을 하지는 않는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사람마다 다른 용어와ニュ앙으로 개념 규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혼란스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왜 그런가? 사랑은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도 머리로 자꾸 따지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본다. 평화를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평화를 개념 규정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평화 구현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 개념 규정이 오히려 획일화와 편협함을 낳고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많이 들 얘기한다. 물론 일리 있는 얘기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가? 평화와 관련하여 정말 우리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할 만큼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사업이 많은가? 대표적으로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이 많다는 것인가? 오늘이 토론 자리가 새롭고 보다 의미 있는 평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둘 만큼 우리는 지금까지의 평화실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보다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나가는 자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허정옥 사장님도 제안했지만 여성포럼이라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의지를 갖고 하겠느냐이다.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새 과제로서 제시한 것 가운데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 유치는 상당히 유용해 보인다. 그래서 제주평화연구원은 단순한 의견제시에 머물지 않고, 이 번 기회에 준비를 하여 올 9월쯤에 한중일 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 및 의의 그리고 제주와 타 지역 개최의 비교론적 검토를 세미나를 통해서 보고서로 만들고 여론의 환기를 불러일으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와 문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평화교육, 평화의식, 평화문화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이와 관련 평화영화 얘기를 하고 싶다. 제주도에서 몇 번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주 계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 세계평화의 섬 지정일인 1월 27일이라든가, 유엔지정 평화의 날인 9월 21일, 4.3사건의 4월 3일, 6.15정상회담 기념일인 6월 15일, 또는 어린이 날, 여성의 날 등등 기념할 만한 날에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기념할 만한 날에 영화를 공짜로 보여준다는 브랜드도 괜찮은 것 아닐까. 매일 영화를 무료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특정의 날에 특정한 주제를 갖고 영화를 보면서 넓은 의미의 평화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평화라는 넓은 틀을 가지고 그 속에 군축, 여성, 생태, 다문화, 장애인 등 그 때 그 때 마다 잘 꼬집어내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글로벌 아카데미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듣기보다 영상을 보면 감흥을 주고 오래 남는 것 같아서, 평화영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마침 한·아세안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화원 얘기를 하고 싶다. 동아시아는 거창하고 동남아는 쉽지 않을 테지만, 나라 문화와 관련된 것을 제주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말레이시아 문화와 관련된 것을 제주에 갖고 와서 문화원을 만들어서 한·아세안적인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제주에 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그렇게 제주에 하나씩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문화원을 유치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백진주 총장님의 발제와 관련해 2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 김만덕 기념관 잘 해 보겠다 해서 신문에 나오다가 흐지부지 하고, 그러다가 1~2년 지나면 또 나오고 그렇게 10년 지난 것 같다. 김만덕 기념관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다. 김만덕 기념관을 다녀온 사람들의 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잘 몰랐는데 그렇게 대단한 할머니인 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왜 이렇게 기념관이 초라한지 모르겠다는 얘기가였다. 부끄러웠다. 제주도에 김만덕 할머니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김만덕 기념관을 ‘김만덕 평화기념관’으로 확대 재편하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인권상생의 4·3과 교류협력의 국제평화에 이어 복지나눔의 김만덕을 추가해서 보다 대대적으로 평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라고 싶다. 4·3평화재단, 국제평화재단에 이어 확대 재편된 김만덕 평화재단을 통해 김만덕 평화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단순히 도민 성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YWCA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들만 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남성도 초청을 하는지요? (총장님 답변 : 초청합니다.) 남성을 초청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을 불러서 덕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된 남성들이 어떤 의미로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게 만들어 보자. 남성과 함께하는 YWCA를 진행해서 가능한 남성을 많이 불러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날을 만들면 좋겠다. 가령 ‘남성협력부’를 만들어서 기부금도 좀 더 받아내면서 제사·경조사 등까지를 양성평등의 평화라는 주제로 잡아 남성과 함께 하나씩 풀어나가는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평화는 아픔을 치유하는 것”

오 영 훈

(제주도의회 의원)

해군기지 문제는 어쨌든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자체는 평화적이어야 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해군당국 지방정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찬반갈등이 있고 찬반갈등을 주장해내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로 해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추진이 안됐다. 그렇지만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놓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 방향, 즉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평화의 섬 제주가 구현하고 있는 삶과 부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여러 대안이 제시됐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화운동이든 평화를 산업으로 얘기하든 사업으로 얘기하든, 이것을 진전시키고 진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갖고 있는 사례가 무엇이고 그 상이 어떤 것인지 그래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까 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리병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그것을 봉합해주고 조정해주고 치유해 줬을 때 동력을 얻고 그것을

평화적 실천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럴 기제들은 갖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4.3이다. 4.3은 역사적 현장에 있었고 그 갈등이 추이되는 과정,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고 복원시키고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이 평화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이제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도록 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4.3 61주년 기념사업이 있었는데 그 때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게 오키나와에 사례를 초청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히로시마의 사례, 난징의 사례, 대만 2·8 사건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국들의 관련도시들을 연대해서 학술 심포지엄을 열게 하고 연대 교류의 장을 만들자. 연안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추진해 왔던 세계섬포럼을 쪽 해왔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례중심으로 고민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이 잘 안 잡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얘기할 때는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쉬운 접근 방법이 모색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평화는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봤고,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다.

“평화의 거리 테마 지구 조성을”

이 광 진

(제주대 교수)

저는 평화사업의 의견보다는 철저히 평화 산업 방향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첨가하여 평화사업과 산업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교수들을 상대로 다양한 특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허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수부터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제주의 관광산업과 평화산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으로서 평화산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위하여는 제주의 선도산업 중 제주의 현실에 맞는 관광 레저산업과 연계하여 평화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방향을 제시하여야 만이 이상으로만 그칠 수 있는 평화관련 사업과 산업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기치를 내건 것은 단순 관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제주만의 특성화된 노력을 통해, 정부 지원도 받고 내부적인 환경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의 평화의 섬 특성에 맞는 평화산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두 분야를 다 같이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선도 산업인 관광 레저 쪽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현재,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단체관광에서 가족관광, 소규모, 테마를 찾는 관광객

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평화의 섬에 걸 맞는 평화관련 테마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한다면 더 한층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제공과 현재의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웰빙 관광차원의 평화관광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관광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관광지 투어를 벗어난 자신에게 맞는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 올레걷기등과 같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고자하는 웰빙여행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TV오락 프로그램 중 '1박2일'에서 제주의 올레를 걷는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올레를 걷고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였으며 매주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와 혼자 올레 길을 걷는다고 하는 사례에서 올레를 걸으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웰빙여행의 차원에서 평화관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TV프로그램에서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유명 관광지 및 볼거리를 소개하는 동시에 여행국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각 거리마다의 삶의 행위들과 그 지역의 향토시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소상히 보여줌으로서 더욱 친근감을 전해주는 내용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기 TV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자하는 생생한 삶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평화로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평화의 테마와 부합하는 지역의 소도시의 거리나 재래 시장등에 평화의 의미를 부여한 거리환경조성으로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면, 제주만의 독특하고 평안한 삶의 정서를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평화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제주도 하면 평화가 떠오르도록 하는 방안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평화로움을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평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평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거리조성은

평화의 테마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의 소 도로에 시설물등을 평화의 주제에 맞게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의 평화의 섬을 홍보하는 효과와 웰빙관광의 욕구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테마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주·야간 생활모습이 거리에서 진솔하게 전달됨으로써 이것이 관광소재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주·야간을 아우르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욱 지역의 발전된 평화테마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거리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평화의 테마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게 되고 거리를 걷는 사람(관광객)들에게 평화로운 제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각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하여 그 지역의 단체와 학교에서 주민들에게 평화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행 할 수도 있고 지역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이 진행된다면 향후, 평화사업과 산업의 인력양성도 가능하여 제주 평화의 섬에 걸 맞는 우수인재의 양성도 가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제주 평화의 섬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거리 선정은 제주지역의 어떤 한 지역이 아닌 평화의 테마에 부합하는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점식으로 평화의 테마지구로 선정하여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자리에서는 제시하는 장소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특정지역들은 장소 마케팅이라든가 도시환경 전문가나 디자인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와 연관된 장소를 생각해 보면, 제주에서 진행되는 평화사업을 볼 때, 제주43 평화공원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주도향일기념관이 있는 조천 만세동산과 모슬포 전적지 공원 계획과 연계한 모슬포 지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이외에 평화의 테마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구 중문도심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과 인접한 구도심지역이 유동관광객이 많다는 점과 제주평화연구원과

컨벤션 센터에서 평화관련 회의가 빈번히 개최되는 연계성으로 인해, 평화의 테마거리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문지역에 야간 볼거리를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따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평화관련 테마 거리를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주·야간의 거리환경을 평화의 테마에 맞도록 쾌적하게 바꾸어서 주·야간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야간의 볼거리와 체험등의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의 거리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소도시의 정취를 느끼면서 평화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한다면 밤에도 상가가 활성화되어 밤 늦게까지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야간의 볼거리가 제공되어 야간관광을 따로 기획하지 않아도 더욱 자연스러운 테마의 관광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해 중문 구 도심지역을 제안해 봅니다.

이러한 평화의 거리 환경개선은 먼저 유동 관광객이 많은 중문을 시작으로 성공한다면 평화테마의 제주43 평화공원과 조천지역, 모슬포 전적지 공원(모슬포지역)등으로 지역을 확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역을 고려해 보았으며, 좀 더 나가서는 이중섭거리가 있는 서귀포도 좋다고 봅니다. 이중섭 거리를 이중섭화백이 꿈꾸어왔던 평화로운 이상과 평화의 테마를 가미한 거리로 개발한다면 그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평화의 테마를 넘어 또 하나 제주의 일출과 석양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평화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평화관광소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에 바다에서 해가 뜨고 지는 자연환경을 갖춘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제주가 참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관을 생각해 보면 중국은 바다로 해가지는 석양을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석양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평화와 접목한 테마를 개발 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출과 석양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성산의 일출과 자구네 포구의 일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출봉이 위치한 성산지역, 그리고 차귀도가 한눈에 보이는 수월봉과 연계한 고산지역에 평화의 테마를 가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마음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평화스럽게 낙조를 보며 한 해를 반성하고 회상하는 마음과 일출을 보며 희망을 갖고 새해 설계하는 것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연현상을 평화라는 테마와 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인접한 지역의 활성화도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제주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평화를 테마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는 각계의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발전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지역의 확산으로 지역이 활성화 되면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평화 관련 축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가 평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산업의 활성화차원과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인 시키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축제로 인한 지역 활성화로 인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이 생기면서 일본의 지역 별 마쓰리 경우와 같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서 그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아 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해 봅니다.

이렇듯 평화에 대한 테마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성화, 차별화를 찾아야하는 이때, 제주 평화의 섬과 부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의 수행으로 지역의 예산이 아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산업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에서 추진해야 할 평화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유관 단체의 긴밀한 협력도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에서 평화 산업과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 결과를 도출할 때, 진정한 제주 평화의 섬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사업과 산업에 대해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에서 추진하고 완료된 17대 평화사업은 일방적으로 추진 주체가 이끄는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참여가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일방적으로 행하면 동참할 사람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같이 가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에 대한 테마를 제주의 환경과 접목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평화사업 방향과 이로 인한 제주의 지역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면서 그 대안으로 평화산업적 측면에서 평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평화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민간중심 운동으로 평화 감수성 일깨워야”

이 신 선

(서귀포 YWCA 사무총장)

저는 현장 활동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받아 평화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로 거리에는 ‘평화의 섬’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온 동네마다 나부끼고 이를 기념해서 공짜술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있을 만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라는 용어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 익숙해져 버린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았다고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평화의섬을 얘기할 때 비전만 있고 실천 전략과 행동프로그램이 없다는 평이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와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 평화는 정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 삶의 과제이다.

또한 ‘평화의 섬’ 운동이 민간중심의 자생적인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제주도정과 전문가 중심으로 치중되어 관 주도 형태의 위로부터의 운동으로 치중되고 있다.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서는 백화점식이 아니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발제문에서 제안한 6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주체간에 전문적인 고유영역과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해야함을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평화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만이 그 실천활동을 하는 추진주체임을 제시하시는 건 위에 제기하신 문제를 또 다시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만으로는 민간중심의 평화의 섬 운동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직까지도 도내 갈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다시 관주도의 평화의 섬 운동으로 지속된다면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귀포 YWCA에서만 해도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도민 및 지역 청소년들의 평화 인식을 제고하며 평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했던 평화아카데미, 평화캠페인, 평화캠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새삼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평화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니까 평화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가 아니라 제주에서 만들려고 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나갈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서 '평화센터'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평화학교'라는 또 다른 어떤 기구를 두고 뭔가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삶속에서 평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여 평화교육의 메뉴얼을 만들어 평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교육들을 통해서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우리 사회 안에 잔재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주의 평화 나아가서는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진행해온 평화사업 관련하여 주체에 여성이 빠져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문 여성과 평화실천운동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전, 평화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 1990년대 전반기만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550만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75%가 비전투원이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 한다.

- 진정한 평화는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얻어질 수 없다. 여성들은 전쟁을 통해 군사주의 문화로부터 형성되는 권위주의와 폭력 그리고 가부장 문화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한 불평등과 비합리성을 보아왔다.

- 전쟁시에 전방에는 주로 남성이 나가지만 여성은 후방에 있으면서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구호물자를 나르며 심지어는 성폭력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군사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은 인권침해와 소수자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에게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함으로써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시키고 키우는 존재로서 본성적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여성이야말로 평화운동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선과 악으로 세계를 나누고 군사화가 촉진되어 준전시체제가 되어버린 세계질서로 인해 군사주의의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폭력성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과 전쟁은 남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간 생명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여성이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여성이 갖는 자매애, 돌봄의 윤리학차원에서 평화를 지향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며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방법은 무수히 많다. 우선은 평화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평화기행, 평화마라톤을 한다든가, 모든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대해 깨어있기 훈련 등은 평화의 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결론적으로 진정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가 겪고 있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등의 갈등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제주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방향이요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평화의 섬 구현사업 발굴 및 실천 방안

“제주형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자”

한 립 화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사회 전반에 평화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 발제문에 명시된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평화를 누릴 권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앞서 발표된 두 발제문에는 평화이론에서부터 제주사회 전반에 걸쳐 펼칠 평화 사업 및 도민의 평화지향 행동 강령까지(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다 들어 있다.

이러한 이론이 시민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단계로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마련되는 일이 시급하다. ‘제주형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하자’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평화현장 등 시민행동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민간 기구는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정착 도민사회를 통합할 소통의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두 발제문 및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사회가 처한 상황과 국민 및 지역민이 누릴 평화에 대한 권리 사이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고 합일한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개념에 입각한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이는 진행남 박사의 발제문에서도 매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제주도에서의 평화실현 실천에는 피할 길 없는 구조적인 장애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제주도민은 분단국가의 국민이며,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 실현 사이에 놓인 gap은 그 틈이 매우 깊고 넓음을 도민 대다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gap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

주섬에 평화정착은 요원하다.

이미 국가차원에서 '4.3사건'에 대하여 과도한 국가 공권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여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로 선포했음에도 일부 국민이 지금도 제기하는 소위 색깔론이라든지, 국가의 방위 강화를 전제하고 강행되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등은 국민과 도민 사회에다 두 개의 상반된 평화의 시각을 제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즉,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평화는 비무장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뿐 아니라 그 평화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 및 논리가 심화됨에 따라 제주사회는 본의 아니게 이를 옹호하는 주체가 되고 말았으며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방관자 집단마저 형성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에 의한 제주도 운영과도 무관하지 않다. 평화정착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시각의 다각화로 인하여 세 부류로 갈라진 도민 간에는 날이 갈수록 각 사안마다 대립각이 첨예화 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평화가 내재된 실생활의 행복추구권이 현실과 상충되거나 대립 관계에 이르게 하는 괴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 어떤 평화실현 계획도 그저 구호에 그칠 뿐,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주사회가 역설적이게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럼으로 요한 갈통의 평화학 등 평화이론을 호리병 속에 넣어두고 필요에 따라 어느 일부를 꺼내어 적용하는 부분적 평화가 아닌, '평화의 섬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 주민 개개인이 누릴 제주형 평화에 대한 확고한 정의, 이미지 정립이 전제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는 모두가 수긍하고 실천 가능하며 이론(異論)의 여지를 두지 않을 정도여야만 한다.

스위스의 제네바는 평화의 실현의 중심에 있기 위하여 영세중립국의 도시로서 모든 힘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힘에서 비롯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방법으로 군사기지 등에 대한 배타적 행동을 꾸준히 대내외에 천명해 오고 있다. 제주형 평화 정착을 위한 방법론 및 도민 행동(Civic Action)강령에 있어서도 도민이 평화를 지향하여 다함께 오직 하나로 나아갈 바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태여성평화포럼 창설을”

허 정 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오늘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두 가지 글 중, 백진주 사무총장의 ‘여성과 평화 실천운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미시적 입장이라면, 진행남 연구위원의 글,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새 과제’는 다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실천적 관점을 따라 평화의 길을 체험하면서 저 멀리 평화의 지평 너머를 바라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백진주 사무총장의 글, ‘여성과 평화실천운동’에 의하면, 평화란 갈등의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녀는 ‘남성보다 여성이 갈등관계를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주체이자 실천가로서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자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의 맥락을 따라가 본다.

먼저 ‘평화·평화문화·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논하는 장에서는 클라우센이 제시하는 평화의 네 영역이 소개되고, 그 중 공동체와 국가 차원에서는 각각 의사소통과 협력, 갈등해결이 주제화되고 있다. 이를 2006년도의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숍과 연계해 보면, 네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소통과 만남을 확산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평화엑스포 개최, 국제 평화전문기관과의 교류 등이 제시된다.

한편 저자는 갈등을 여성운동과 연계해서 ‘제주여성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왔는지’를 해녀, 김만덕 여사 등의 예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요컨대 제주여성들은 헌신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평화실천운동의 지평을 넓혀 갈등을 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사회에 남아 있는 산남·북간의 지역 갈등, 세대간 갈등, 해군기지 등의 지역사회 갈등의 현상 속에서 갈등의 원인을 배타성 등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지혜를 모아, 희망을 갖고 삶의 현장에 다가가야 하며,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평화의 생명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녀가 고민하는 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도무지 평화를 맞볼 수 없게 하는 예고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성의 주체인 여성들이 제주 자연 속에서 갈등의 원인을 치유해 나가자는 것으로 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협동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갈등을 삶의 자연스런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자'는 수용론과 함께 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평화만들기 실천방안'에서는 공동체문화 형성, 열린 강좌 및 워크숍 등의 소그룹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적극적 경청을 통해 의사소통의 장애물 제거, 평화네트워크 구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나의 생각을 곁들여 보면,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격년으로 실시되는 제주평화포럼과 연계해 '아태여성평화포럼(안)'을 창안하자는 것이다.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내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문제 및 예술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제주 여성의 특성을 가미한다면 다양한 평화 관련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백진주 사무총장의 글이 평화실천의 주제로서 개인(여성)의 관계와 소통을 고민하고 있다면, 진행남 연구위원의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새 과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글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평화를 이론적·담론적 차원에 머물게 하지 말고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여기에서는 갈등 해결의 방안으로 백진주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소통의 차원에서 진행남 연구위원의 글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행남 연구위원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이념적 배경에서 제주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서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를 정리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선언된 '제주평화현장'에서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관용과 화합의 사회를 구현한다'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국제연대를

통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는 평화기반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국제평화의 섬 모형에서 논의되는 ‘국제 교류·협력의 거점 모형’에서 제주도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볼 때,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가들간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그 가능성이 돋보인다. 이 점에서 ‘제주도를 동아시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정상회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다가오는 2009년 6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를 제네바와 같이 아시아의 평화 담론 및 실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저자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계획된 17대 사업 중 제주평화포럼과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사업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 양대 사업은 비교적 원만하게 수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 유치를 준비하자는 제안 또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2010년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등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제주를 ‘아시아 평화회의 중심지’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평화의 섬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 매우 실효성이 높은 대안으로 제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회의 장소로서 제주의 역할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져야 하리라 본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에 MICE 산업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평화회의들의 개최 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 중에서 ‘제주도를 평화회의를 통해 평화의 섬으로 확립해 나가자’는 제안은 아시아 10위의 국제회의 위상을 나타내고, 국내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